제544호 (2012-20) 2012. 10. 19.

e-KIET 산업경제정보

최근 방위산업 수출 동향과 향후 과제

[요 약]

○ 국내 방위산업 수출은 최근 빠르게 증가하여, 2011년 수출 수주실적이 24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
- 과거 단순 구성품 위주에서 함정, 항공 등 기술·자본집약적 제품이 수출을 주도하고, 아시아, 북미, 중동 등 3개 권역 중심으로 집중화

○ 최근 글로벌 무기거래 확대 및 수출입 시장의 다변화로 신규시장 진입 기회는 보다 확대될 전망

○ 그러나 국내 방위산업 수출 규모는 총 생산액 대비 4%대에 그치는 등 내수 편향적 산업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
- 반면, 선진국 방위산업 수출 비중은 미국의 경우 15~23%, 영국 24~28%, 프랑스 23~25%, 독일 35~50% 등이며, 특히 이스라엘은 71~78%를 수출, 방위산업을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육성 중
- 국내 방위산업 제품의 수출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82~87% 수준이며, 특히 기업 및 정부 경쟁력은 55~61%에 불과

○ 정부는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정책의 핵심목표로 명시하고, 수출 주도형 지원체제 확립을 위한 제도 구축에 매진할 필요
- '개방과 경쟁' 체제의 확립과 원가제도의 개선, 기업 주도의 시장지향형 제품 개발 및 수출 시 기술료 면제 등 제도 개선을 통한 방산수출 활성화 유도
- 아울러, 맞춤형 수출시장 확대전략 수립과 one-stop service 개념의 방산수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등 수출지원제도 개선, 민·군 기술협력 분야 확대 및 수출산업화 촉진이 시급

KIET 산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 2011년 방산수출 수주실적은 24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국내 방위산업(이하 '방산'으로 지칭) 수출은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과 현 정부의 '방위산업 신성장동력화' 정책으로 2011년 기준 23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함.

– 수출 수주실적은 과거 연평균(2002~2006) 2억 6,000만 달러에서 최근 연평균(2007~2011) 13억 2,000만 달러로 5배 이상 크게 증가함.

– 또한 2012년 4월 영국의 군수지원함 4척(7억 2,000만 달러) 등 9월까지 약 18억 달러의 수주실적을 달성하여, 작년의 최고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됨.[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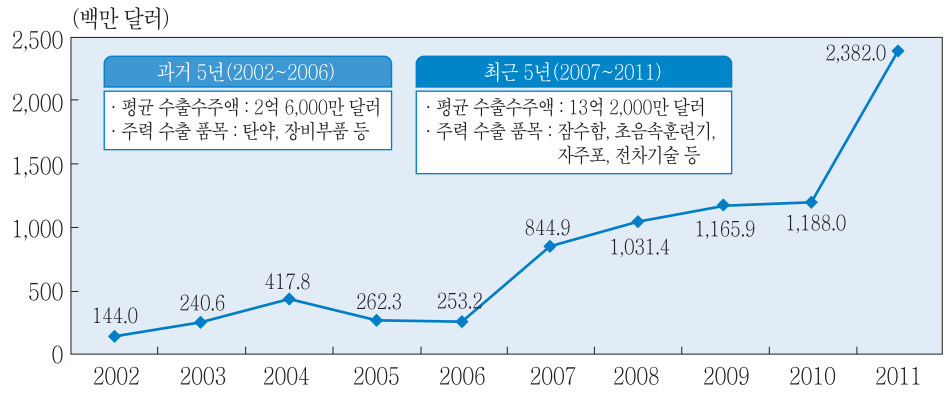
□ 함정, 항공 분야 등 기술 및 자본집약적 제품이 수출을 주도

○ 주력 방산수출 품목은 과거 탄약, 장비 부품 등 단순 구성품 위주에서 잠수함, 훈련기, 자주포 등 기술 및 자본집약적 완제품으로 다양화·첨단화 추세를 보임.

○ 특히, 함정 및 항공 분야는 최근 5년(2007~2011)간 총 수출수주의 52.5%(34억 7,000만 달러)를 차지하여 방산수출 성장을 견인함.

– 함정 분야는 인도네시아에 209급 잠수함 수주 성공으로 2011년 전체 수출의 45.4%(10억 8,000만 달러)로 최고 비중을 차지함.

〈그림 1〉 국내 방산수출 수주실적 추이(2002~2011)



자료 : 「방위사업청 통계연보」, 2011; 방위사업청 내부자료, 2012를 기초로 산업연구원 작성.

1) 방위사업청은 2012년도 방산수출 수주 목표를 30억 달러로 설정하여 추진 중임(방위사업청, 2012).

〈표 1〉 방산제품군별 수출 수주 실적 현황(2006~2011)

단위 : 백만 달러,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누계 (2007~2011)
항 공	101.7	440.3	258.9	98.9	237.8	849.8	1,885.7
	(40.2)	(52.1)	(25.1)	(8.5)	(20.0)	(35.7)	(28.5)
함 정	0.0	0.0	0.9	137.0	365.5	1,082.2	1,585.6
	(0.0)	(0.0)	(0.1)	(11.8)	(30.8)	(45.4)	(24.0)
탄 약	50.2	288.1	258.0	231.4	333.7	272.9	1,384.1
	(19.8)	(34.1)	(25.0)	(19.8)	(28.1)	(11.5)	(20.9)
기 동	18.5	37.8	360.7	324.6	84.9	71.7	879.7
	(7.3)	(4.5)	(35.0)	(27.8)	(7.1)	(3.0)	(13.3)
총포/화력	65.8	26.7	101.9	159.1	114.9	12.0	414.6
	(26.0)	(3.2)	(9.9)	(13.6)	(9.7)	(0.5)	(6.3)
통신전자	2.8	7.8	17.9	170.7	25.9	55.5	277.8
	(1.1)	(0.9)	(1.7)	(14.6)	(2.2)	(2.3)	(4.2)
기 타	14.3	44.3	33.1	44.2	25.2	37.7	184.5
	(5.6)	(5.2)	(3.2)	(3.8)	(2.1)	(1.6)	(2.8)
합계	253.2	844.9	1,031.4	1,165.9	1,188.0	2,382.0	6,612.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통계연보」, 2011.
주 : ( ) 안은 총 수출수주액 대비 비중.

– 항공 분야는 2007년 터키 KT-1 기본훈련기를 시작으로 2011년 T-50 고등훈련기 등 최근 5년(2007~2011) 기준 전체 수출의 28.5%(18억 9,000만 달러)를 기록함.

□ 아시아, 북미, 중동 등 3개 권역에 방산수출 집중화 추세

○ 아시아, 북미, 중동(터키 포함) 등 3개 권역이 최근 5년(2007~2011)간 국내 방산수출 수주금액의 93.2%(61억 6,000만 달러)를 차지함.

– 특히 아시아는 2011년 인도네시아에 T-50 고등훈련기, 209급 잠수함 수주 성공으로 전체의 39.6%(26억 2,000만 달러)를 차지하여 중심권역으로 급부상함.[2)]

2) 최근 동일 권역의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에 기동, 함정, 항공 분야 등의 방산제품 수출을 추진 중에 있어 향후 방산수출이 계속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표 2〉 권역별 방산수출 수주실적 현황(2007~2011)

단위 : 백만 달러, %

	2007	2008	2009	2010	2011	누계 (2007~2011)
아시아	185.4	91.9	290.0	483.5	1,565.7	2,616.6
	(21.9)	(8.9)	(24.9)	(40.7)	(65.7)	(39.6)
북미	210.6	332.4	401.4	487.2	640.6	2,072.0
	(24.9)	(32.2)	(34.4)	(41.0)	(26.9)	(31.3)
중동	423.9	446.3	377.1	116.3	109.5	1,473.0
	(50.2)	(43.3)	(32.3)	(9.8)	(4.6)	(22.3)
아프리카	0.7	127.2	11.8	50.8	19.6	210.1
	(0.1)	(12.3)	(1.0)	(4.3)	(0.8)	(3.2)
유럽	15.5	8.2	75.9	35.9	29.8	165.3
	(1.8)	(0.8)	(6.5)	(3.0)	(1.3)	(2.5)
중남미	9.0	25.3	9.3	14.3	15.3	73.2
	(1.1)	(2.5)	(0.8)	(1.2)	(0.6)	(1.1)
러시아/CIS	0.0	0.1	0.5	0.0	1.4	2.0
	(0.0)	(0.0)	(0.0)	(0.0)	(0.1)	(0.0)
합계	844.9	1,031.4	1,165.9	1,188.0	2,381.9	6,612.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내부자료, 2012.
주 : ( ) 안은 총 수출수주액 대비 비중.

– 북미 지역은 미국을 중심으로 탄약, 항공기용 엔진부품, 미 전투기 창정비 등 최근 5년(2007~2011)간 전체 수출의 31.3%(20억 7,000만 달러)를 차지하여 안정적인 수출실적을 유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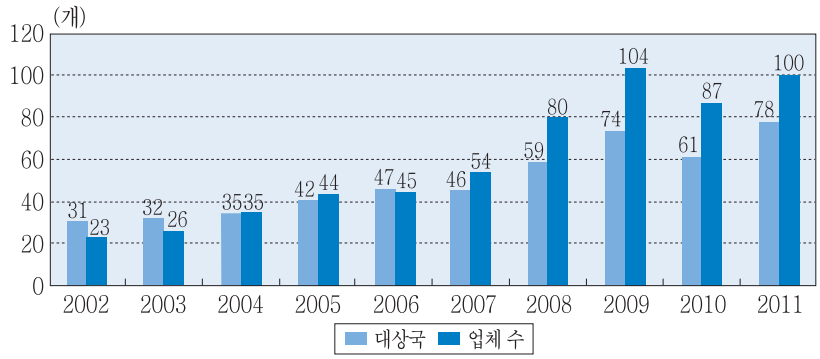
– 중동 지역은 터키에 K-2 전차 기술수출 등으로 최근 3년(2007~2009)간 총 수주금액 대비 41.9%(연평균 4억 2,000만 달러)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추가수주 부족으로 감소 양상을 보임.

□ 대상국가 다변화 및 수출기업 수 증가에 따른 방산수출 기반 확대

○ 최근 10년간(2002~2011) 방산수출 대상국가 및 국내 참여 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방산수출 기반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 방산수출 대상국은 2002년 31개국에서 2011년 78개국으로 2.5배, 방산수출 참여 기업 수는 23개에서 100개로 4.3배 증가함.

〈그림 2〉 방산수출 대상국 및 참여기업 수 현황(2002~2011)



자료 : 안영수, 「국방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 수립연구」, 산업연구원, 2010; 방위사업청 수출진흥과, 내부자료, 2012를 기초로 재작성.
주 : 집계된 수출 대상국 및 참여기업 수는 계약실적 기준.

□ 정부의 적극적인 방산수출 지원 노력의 성과 가시화

○ 최근 정부의 '방위산업의 신성장동력화' 정책 추진과 조직 및 제도 신설, 방산수출 지원제도 수립 등이 방산수출 증가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됨.

–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설립(2009), 국방산업 G7 발전전략 수립(미래기획위원회, 2010), 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2011)[3] 등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추진됨.

– 또한, 정부 간 거래제도(G to G) 및 패키지 딜(package deal) 지원, 수출절충교역 규정 신설, 이차보전제도 마련 등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제도가 수립됨.

– 아울러, 국제방산전시회 개최 및 참가 지원 등 수출시장 개척활동 지원과 방산수출 전문 인력 양성, 수출품 정부인증(DQ 마크) 제도 및 수출입 지원정보체계 운영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 일부 방산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개선도 수출 확대에 기여

○ 안정적 국내 수요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함정, 항공 등 일부 방산제품군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특히 함정 분야의 경우, 내수시장의 업체 간 경쟁구조 정착, 세계 최고수준의 조선산업 역량에 기반한 내부 기술이전(intra spin-on) 활성화 등을

3) 범정부 차원의 국방산업 육성 및 방산수출 활성화 정책 조정을 위한 control tower로서 지식경제부와 국방부 공동의 「국방산업발전협의회」가 2011년 발족되어 운영 중임.

〈표 3〉 방산수출 관련 주요 정책추진 현황(2008~현재)

	주요 정책	주요 내용
조직 신설/ 확대	범정부 수출네트워크 구축	· 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설립/운영(2009.9~현재)
		·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신설(2011.9)
	방산수출 전담부서 개편 및 확대	· 방사청 방산수출지원추진단(비상근) 및 수출진흥과 신설
		· 방사청 방산기술통제관 신설(2012.7)
전략 수립	발전전략 수립	· 국방산업 G7 발전전략 수립(미래기획위원회, 2010)
수출 지원 제도 개선	방산수출 관련 제도개선	· 정부 대 정부 간 판매제도 규정 마련, 패키지 딜 지원 도입(2009.12) · 수출절충교역 규정 마련(방위사업관리규정 제680조의 4~10)
	방산수출 시 기술료 감면	· 국내 조달물량 대비 수출물량에 따른 감면 실시
		· 감면 사유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료 감면 확대(최대 50%) 등
	방산수출 융자·마케팅 지원	· 이차보전사업을 통한 장기 저리(0.5~1%) 자금 융자(160억원, 2012)
		· 수출 성사 시 마케팅 비용 원가보전 등
국제 협력 강화	정부 간 방산협력활동 강화	· 31개국과 국제 방산군수협력 MOU 체결, 20개국과 군수품 및 용역에 관한 품질보증협력 MOU 체결(2011) 등
방산 수출 시장 개척	수출시장 개척활동 지원 강화	· 말레이시아 국제방위산업전(DSA) 등 해외전시회 참가(2012), 군수무관 및 방산협력관 파견 등
		· 연불금융, 산업협력, 기술 이전 등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 수렴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 국내 방산전시회(ADEX, Marine Week Naval & Defense) 개최(홀수해 10월)
		· 국제에어쇼 참가 지원(47억원, 2012.7)
인프라 구축	방산수출 인프라 확충	· 방산수출 전문인력 양성 교육(연 2회 실시)
		· 방산수출품 정부인증(DQ마크) 제도 시행
		· 방산수출입지원 정보체계(D4B) 운영 등

자료 : <그림 2>와 동일.

통해 잠수함, 군수지원함 등 일부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 항공 분야의 경우, 훈련기 및 기동헬기 등 완제기 국내 개발 역량 확보, 글로벌 방산기업과의 전략적 제휴체제 구축 등에 힘입어 인도네시아 수주 성공 이후 페루, 이라크, 미국 등으로의 시장 진입이 활발히 진행 중임.

– 화력 분야의 경우, 자주포, 전차 등의 지속적인 국산화 개발에 따라 기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글로벌 시장개척 활동을 지속한다면 향후 방산수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4)]

4) 그러나 그 외 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 기동, 방호 분야 등은 가격 및 기술경쟁력이 각각 절대적으로 미흡하여 경쟁력 개선 및 수출 확대를 위한 맞춤형 제도 수립이 필요한 실정임.

〈표 4〉 국내 방산제품군별 글로벌 경쟁력 및 경쟁우위요소 분석 결과

	경쟁력 절대 수준*		상대적 경쟁우위 요소**	비고 (상대적 종합 평가)
	기술 경쟁력	가격 경쟁력		
함정	☆	☆	–	현재 핵심 역량 보유
항공	○	○	–	핵심 영역으로 발전 가능
화력	○	○	–	
지휘통제통신	○	×	◇	가격경쟁력 개선 필요
감시정찰	×	○	◆	기술경쟁력 개선 필요
기동	○	×	◇	가격경쟁력 개선 필요
방호 및 기타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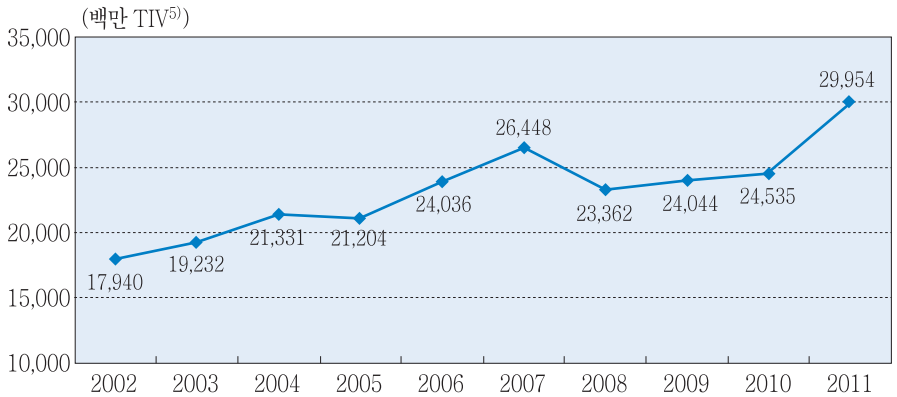
자료 : 안영수 외, 「방위산업의 글로벌 환경변화와 경쟁력 평가」, 산업연구원, 2011.
주 : * 선진국 대비 90% 이상은 ☆, 선진국 대비 80~90% 수준은 ○, 선진국 대비 80% 미만은 ×.
** 기술 vs. 가격경쟁력의 상대적 우위 기준임. ◆는 가격 우위, ◇는 기술 우위.

□ 글로벌 무기거래 확대 및 시장다변화로 신규 시장진입 기회 증가 예상

○ 또한 대외적 측면에서, 세계 무기거래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는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기회 요인으로 작용함.

– 세계 무기거래량은 일부 선진국들의 국방예산 감축에도 불구, 아시아, 중동, 중남미 국가들의 무기수요 증대로 최근 10년(2002~2011)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3〉 세계 무기거래 규모 추이(완제품 기준, 2002~2011)



자료 : SIPRI,[6]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2012.

5) TIV(Trend Indicator Value)는 SIPRI의 국제 무기거래량 지표로 국가 간 무기거래량(arms transfer)의 상호 비교 및 연도별 추이 분석에 활용되며, 차관에 의한 무상거래도 포함됨.

6)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는 1966년에 설립된 국방, 안보 및 외교 정책 분야의 저명한 비영리 국제 연구기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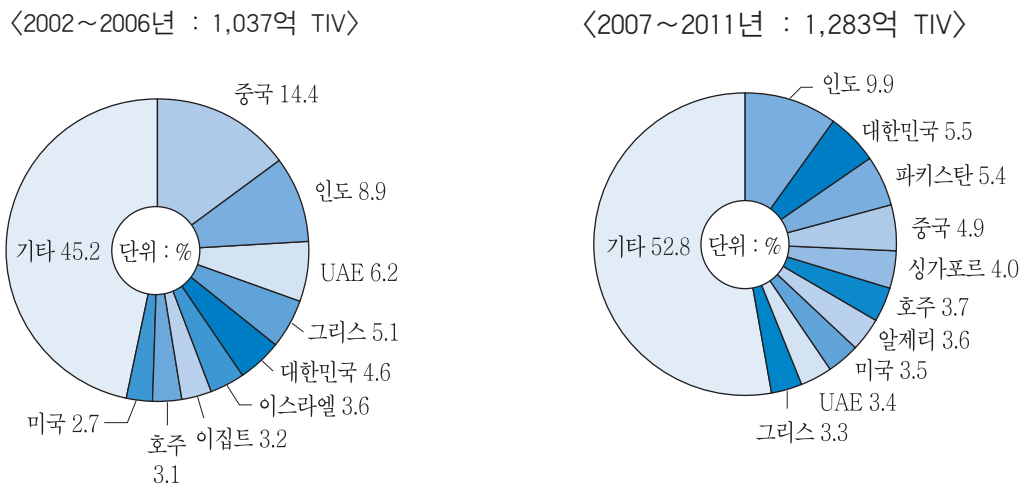
○ 국가별 수입 규모 측면에서 보면, 기존 무기 수입 국가들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기타 국가들의 수입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어 수입선 다변화로 인한 신규 진입기회 확대 여지가 충분함.

- 과거 5년(2002~2006)에 비해 최근 5년(2007~2011)간 중국, UAE 등 상위 10대 수입국의 수입 비중이 6.6%포인트(54.8→47.2%) 감소함.[7)]
- 반면, 인도(8.9→9.9%), 파키스탄(2.3→5.4%), 싱가포르(1.3→4.0%), 호주(3.1→3.7%)등의 수입비중은 증가 추세임.
- 또한, 주요 10대 수입국 외 기타 국가들의 수입 비중도 영토 및 자원분쟁, 내전, 정치,[8)] 종교·이념 갈등 요인 등으로 과거 5년 대비 7.6%포인트(45.2→52.8%) 증가함.

○ 또한 공급 측면에서도 전통적인 방산선진국의 비중이 하락하고, 중·후발국들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는 등 다변화 추세를 보여 신규 진입 기회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5년(2007~2011)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상위 5개국[9)] 비중은 과거 5년(2002~2006)간 대비 3.3%포인트(78.5→75.2%) 하락함.

〈그림 4〉 세계 방산 수입시장의 다변화 추이(2002~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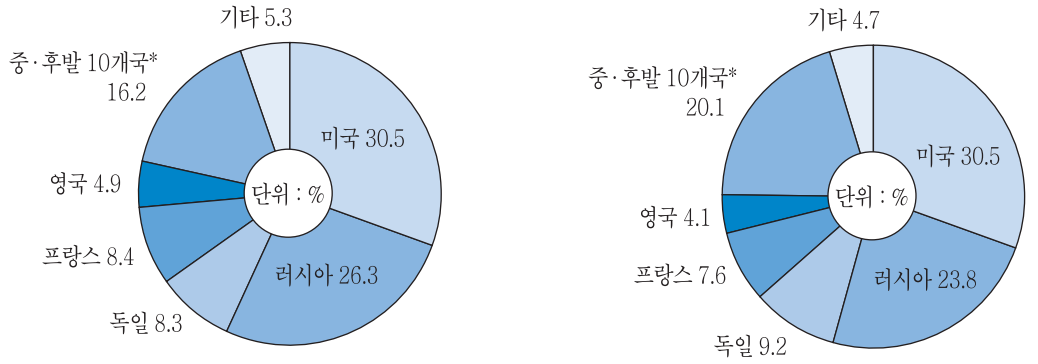
자료 : 〈그림 3〉과 동일.

7) 특히 중국(14.4→4.9%), 이스라엘(3.6→1.4%) 등의 수입 감소세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자체 무기개발 역량 강화를 통한 자국 군수요의 수입대체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따른 방산수출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8) 아랍의 봄(Arab Spring)으로 불리는 북아프리카, 중동, 아랍 국가들의 대규모 반정부·민주화 시위 등도 최근의 무기거래량 증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9) 냉전시대 방산 수출시장을 양분하던 미국, 러시아와 함께 서유럽의 독일, 프랑스, 영국 등 3개국을 의미함.

〈그림 5〉 세계 방산 수출시장의 다변화 추이(2002~2011)



자료 : 〈그림 3〉과 동일.
주 : *는 최근 10년(2002~2011년) 수출합계 점유율 기준으로 중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스라엘, 스페인, 스웨덴, 우크라이나, 스위스, 캐나다, 대한민국 순.

-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10]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 10개 중·후발국 비중은 과거 5년(2002~2006) 대비 최근 5년(2007~2011) 3.9%포인트(16.2→20.1%) 상승함.
- 이처럼 국제 방산시장의 경쟁구조는 일부 선진국 간 경쟁에서 중·후발국을 포함한 다국가 간 경쟁 체제로 빠르게 전환 중임.

□ 방산수출 수주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내수 편향적 산업구조 지속

○ 수출 수주의 증가세에도 불구, 국내 방위산업의 생산액 대비 수출 비중은 4%대에 그쳐 내수 편향적 산업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주요 제품의 경쟁력도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산업연구원(KIET)의 방위산업 통계조사(2011)에 따르면, 국내 방산수출은 통관 기준 약 3억 8,000만 달러 규모로 세계 14~15위 수준이며, 생산액 대비 수출비중은 최근 3년(2008~2010)간 3.9~5.5% 수준에 불과함.
- 반면, 선진국 방산수출 비중은 미국 15~23%, 영국 24~28%, 프랑스 23~35%, 독일 35~50% 등으로 높은 편이며, 특히 이스라엘은 생산액의 71~78%를 수출, 방산을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육성 중임.[11]

10) 특히 중국의 경우, 과거 러시아의 주력 수출시장이었던 구동구권으로의 수출시장 확대, 아시아, 중동 등 신흥국 시장 개척 등 활발한 수출 추진으로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2011년 시장점유율 4위(4.5%) 국가에 진입함.
11) 이스라엘 국방부 방산수출국(SIBAT), 2012.

– 또한 국내 방산제품의 수출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82~87% 수준이며, 특히 기업 및 정부 경쟁력은 55~61%에 불과함.

○ 선진국 수준의 방산수출 달성을 위해서 정부는 방산수출의 확대와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를 방산정책의 핵심 목표로 분명하게 제시하고, 수출주도형 지원체제 확립을 위한 제도 구축에 매진할 필요가 있음.

– 대표적인 추진 과제로서 '개방과 경쟁' 체제의 확립과 원가제도 개선, 기업 주도의 시장지향형 제품개발, 맞춤형 시장진출 전략 및 수출지원제도 개선, 민·군 기술협력 분야의 확대 등이 시급함.[12)]

□ 개방과 경쟁 체제 확립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획기적 개선 필요

○ 먼저, 197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방산물자·업체 지정제도[13)]'와 '방산원가제도[14)]' 등의 개선을 통해 현행 '독과점적 산업구조'에서 미국, 이스라엘 등 선진국과 같은 '경쟁지향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함.

○ 사업타당성 제도[15)] 등 국방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분석 시, 수출가능성,[16)] 국제공동개발 가능성 등을 심층 검토하여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 관련 부처의 기능이 현재의 국방 획득 및 조달 중심에서 향후 산업발전 및 수출정책 개발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전환되어야 함.

□ 기업 주도의 시장지향형 제품 개발 및 기술료 제도개선을 통한 방산수출 활성화

○ 국방 연구개발 사업을 국방과학연구소(ADD) 중심의 정부 주도 개발체제에서 초기 수출시장을 고려한 기업 중심의 제품 기획, 개발, 생산체제로 대폭 전환함.

---

12) 본고에서 제시하는 방산수출 주요 정책과제는 산업연구원이 기 수행한 민·군 기술협력 기본계획(2012.4)과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2012.7) 정책연구의 내용을 재정리한 것임.

13) 주요 군수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 이를 생산하는 지정업체(방산업체)에 수의계약, 원가보상, 우선구매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임.

14) 방산물자 생산에 따른 실발생 총원가에 일정 보상률을 적용한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제도임.

15) 현 사업타당성 제도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전담하여 예산확정 직전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사업의 경제성 분석, 사업추진 준비도 분석, 정책적 분석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주로 국방 획득 및 조달 관점에서 수행되고 있음.

16) 이탈리아는 자국 M-346 훈련기 개발 시 자국 군 소요 충족이 아닌 수출가능성을 최우선 고려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등지로의 해외 수주에 성공하였으며, UAE, 싱가포르, 미국 등에도 추가 수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이를 위해 정부는 안보전략·비닉(秘匿), 미래핵심기술 등 시장실패가 작용하는 분야 위주로 집중 육성하고, 시장성 및 수익성이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업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유인 제공 및 정책 보완이 요구됨.

○ 기업의 R&D 투자 참여 확대를 위해 연구 주관기관에 원칙적으로 실시권을 허여하고, 수출 시 기술료를 한시적으로 면제,[17] 또는 연차별 우대하는 등 방산수출 활성화에 초점을 둔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맞춤형' 수출시장 확대 전략 및 수출지원제도의 수립

○ 아시아, 북미, 중동 등 현 수출주도 지역에서의 주도적 입지 강화, 중남미, 동유럽 등 수출 미개척 지역에 대한 시장 확대를 위해 국가별·권역별로 '맞춤형 시장진입 전략' 마련이 요구됨.

– 이를 위해 구매국 절충교역 요구 시 대응력 강화, 정부 간 거래(G to G) 및 패키지 딜(package deal),[18] 연불수출금융제도 확대, 이차보전제도[19] 개선 및 확대 등이 필요함.

○ 또한, 글로벌 방산수출 경쟁력을 보유한 일부 제품에 대한 '맞춤형 수출지원제도'를 통해 글로벌 방산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을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요구됨.

– 이를 위해 수출형 개조개발 제품 R&D 지원제도,[20] Test Bed 제품 우선구매 제도[21] 등의 도입이 필요함.

○ 아울러 범정부적 대규모 방산수출 분야의 민·관·군 협력 강화를 위한 '방산수출협력 네트워크' 및 one-stop service 개념의 '방산수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17) 미국과 영국 등 글로벌 방산선진국들도 자국 방산기업의 수출제품에 대해 기술료를 공제(recoupment)하거나 면제하는 방식으로 방산수출을 간접지원하고 있음.

18) 최근에는 기술제공, 부품생산 협력 외에도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차관 제공, 잉여 및 도태장비 지원, 산업협력 등 경쟁국가 대비 차별화된 조건 제시를 통해 방산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는 경우가 빈번함.

19) 현행 이차보전제도는 '선적 전 금융'(제작금융, R&D 자금 등)에 소규모로 한정되어 있으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선적 후 금융'으로 지원범위의 확대 및 지원규모의 대형화가 필요함.

20) 국내 소요군의 높은 요구조건에 따라 개발된 무기체계의 글로벌 가격경쟁력 저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수출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대해 정부가 개조·개발 R&D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임.

21) 수출용 무기체계 제품을 정부가 일부 선구매하여 각 병과학교 등에서 시범·훈련용으로 활용, 소요군에 전력화하는 제도로 이스라엘 및 일부 선진국에서 방산수출을 촉진하는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표 5〉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향후 정책과제

	현행	개선 방안
산업정책/제도 선진화	· 보호·육성 중심 방위산업 정책	· 개방과 경쟁을 통한 방위산업구조 개선 · 방산물자·업체 지정제도, 방산원가제도 개선
	· 단순 수입대체를 통한 획득 및 조달 중심 · 내수 편향적 산업구조 지속	· 수출가능성, 국제공동개발 가능성을 고려한 사업타당성제도 개선 · 관련 부처 기능을 국방 획득 및 조달 위주에서 산업발전 및 수출정책개발 중심으로 전환
국방 연구개발/생산체제 개편	· 정부(ADD) 주도 개발 및 투자 지속	· 기업주도 개발·생산 체계로의 전환 · 정부는 안보전략·비닉, 미래 핵심기술 분야 위주로 집중 육성
	· 기업자체 R&D 투자 미흡	· 연구주관 기관에 원칙적 실시권 허여, 수출 시 기술료 면제 등
수출시장 확대/수출지원제도 개선	· 방산수출 지원 조직(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설립 · 이차보전제도는 연 1회 방산수출 생산비용 지원 등 선적 전 금융지원에 한정	· 전략지역 선정을 통한 '맞춤형 시장진입 전략' 마련 · 정부 간 거래(G to G), 패키지 딜, 연불수출금융지원제도 확대, 이차보전제도 개선 및 확대 등
	· 글로벌 방산시장의 높은 진입장벽 극복을 위한 지원방안 부족 · 구매국 요구 조건에 대한 세부 대응력 부족, 전략적 지원체계 미흡	· 기업의 요구 수요별 '맞춤형 수출지원제도' 수립 · 수출형 개조개발 R&D 지원, Test Bed 제품 우선구매 지원 도입 등 · 방산수출 통합지원시스템(one-stop service) 구축 등
민·군 기술협력 확대/수출산업화	· 민·군 겸용기술사업 위주의 소규모 단위 R&D 사업 실시 · 민·군 기술협력 적용 제품의 수출성과 미미	· 민·군 기술협력 범위 및 규모의 대폭 확대 · 민·군 기술협력사업의 사전기획 및 사업타당성 검토 기능 강화

자료 : 산업연구원 작성.

□ 민·군 기술협력 분야의 대폭 확대와 수출산업화 촉진

○ 현 민·군 기술협력사업의 범위 및 단위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민·군 간 상이한 R&D 지원 및 보상시스템 개선을 통해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함.

○ 민·군 기술협력 적용 제품 분야의 수출 촉진을 위해서는 내수시장 외에도 세계시장 경쟁가능성 및 수출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민·군 기술협력사업의 사전기획 및 사업타당성 검토 기능을 현재보다 대폭 강화해야 함.

김 창 모
(연구원·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
cmkim@kiet.re.kr
(02-3299-3258)

장 원 준
(부연구위원·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
wjjang47@kiet.re.kr
(02-3299-3284)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www.kiet.re.kr**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발간된 산업경제정보 및 더욱 상세한 관련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IET 산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발행인 송병준 / **편집인** 하병기 / **편집·교정** 조계환
130-74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66
Tel : 3299-3114 / Fax : 963-8540 / www.kiet.re.kr